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및 영향 점검

김예슬 | 책임연구원(3705-6155)

-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담은 대규모 패키지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하원에서 가결(5.22일)된 후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어 주요내용 및 영향을 점검
- [주요 내용] 트럼프가 공약한 ▲기존 감세안(TCJA: Tax Cut and Jobs Act of 2017) 연장 ▲신규 감세 도입 ▲국경·안보·방위비 지출 확대 등과 함께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IRA 청정에너지 보조금 예산 폐지 ▲부채한도 증액 등으로 구성
 - (기존 감세안(TCJA) 연장) ①현행 과세구간 유지 및 최고세율 인하 영구화 ②표준공제액 확대 ③자녀세액 공제 확대 영구화 및 요건 한시적 완화 등
 - (신규 감세안 도입)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 공약인 ①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이자 세금 감면 ②고령층 사회보장수당 세금 감면 ③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 (재정지출 삭감·확대) ①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②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메디케이드 삭감 ③국경·안보·방위비 증액 등
 - (부채한도 증액)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한도 \$4조 증액(현 \$36.1조→\$40.1조)
- [영향 및 전망] 패키지 법안은 시행 초기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나 FY34년 재정적자를 \$2.9조~ \$3.3조까지 증가시켜 구축효과 확대 및 금리 상승으로 장기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
 - 연방정부의 재정 현황: 금년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미 불안정하며 재무부가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법안 개정에 따른 추가 악화 소지가 상당
 - 재정수지 악화 전망: 법안은 시행 초반인 단기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고 FY34년 재정적자를 \$2.9조~\$3.3조로 증가시켜 과거에 비해 높은 적자 수준을 초래할 전망
 - 실물경제 영향: 법안 시행 초기에는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 다만, 관세 영향이 잠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유발, 구축효과 확대로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 예상
 - 금융시장 영향: 미국 부채비율이 이미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미 국채의 글로벌 수요 약화로 시장 불안이 지속될 우려
 - 최종 입법 전망: 다수 기관은 법안의 최종 통과 시점을 7월말~8월초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며, 상원에서 법안이 대폭 수정될 소지도 상당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시사점]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 난항 및 수정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감세 기조 유지와 재정적자 확대가 전망되어,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국채금리 불안 등이 이어지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담은 대규모 패키지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하원에서 가결(5.22일)된 후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어 주요 내용 및 영향을 점검

-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연초부터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 주요 공약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 상원의 논의를 앞둔 가운데, 독립기념일(7.4일) 이전 의회 통과 및 대통령 최종 승인을 목표로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에 속도를 내는 모습

※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 특정 예산안(의무 지출, 세입, 부채한도)에 대해 의결정족수 단순 과반(51표) 충족 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미국 의회의 절차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4월 케빈 해셋(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및 공화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7.4일까지 감세안 마련을 요구(Bloomberg)
- 한편, 백악관은 이달초 간결한 FY26년 예산안(skinny budget)을 의회에 제출(5.2일)했으며, 의회는 ‘패키지 법안’ 지출 규모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될 소지(Bloomberg)

□ [주요 내용] 트럼프가 공약한 ▲기존 감세안(TCJA: Tax Cut and Jobs Act of 2017) 연장 ▲신규 감세 도입 ▲국경·안보·방위비 지출 확대 등과 함께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IRA 청정에너지 보조금 예산 폐지 ▲부채한도 증액 등으로 구성

- 기존 트럼프 감세안(TCJA) 연장: ① 현행 과세구간 유지 및 최고세율 인하 영구화 ② 표준공제액 확대 ③ 자녀세액 공제 확대 영구화 및 요건 한시적 완화 등
- 신규 감세안 도입(~28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 공약인 ① 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이자 세금 감면 ② 고령층 사회보장수당 세금 감면 ③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 재정지출 삭감 및 확대: ①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메디케이드 삭감 ③ 국경·안보·방위비 증액 등
- 부채한도 증액: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한도 \$4조 증액(현 \$36.1조→\$40.1조)

〈표1〉 공화당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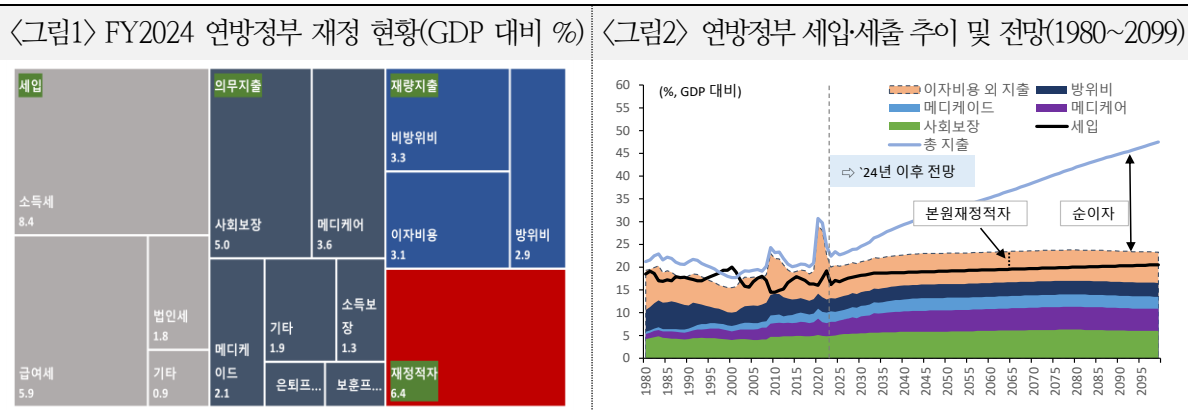
부문	주요 내용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에서 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이자 세금 감면 • 고령층 사회보장수당 세금 감면 •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상향(\$10,000→\$40,000) • 현행 과세구간 7단계 유지, 최고세율 인하(39.6%→37.0%, 당초 `25년말 만료) 영구화(`26년 시행) 		
	과세구간	연장안	(구) 감세이전
	1	10.0%	10.0%
	2	12.0%	15.0%
	3	22.0%	25.0%
	4	24.0%	28.0%
	5	32.0%	33.0%
	6	35.0%	35.0%
	7	37.0%	3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공제액 확대(개인 \$8,300→\$16,300 / 세대주 \$12,150→\$24,500 / 부부 \$16,600→\$32,600) 자녀세액 공제 확대(\$1,000→\$2,000) 영구화 및 세액공제 요건 한시적 강화(~28년) 상속세, 증여세 면제 영구 연장, '26년 신고 시 면제액 상향(개인 \$1,500만 / 부부 \$3,000만)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투자(전산업, 제조 관련 해외 시설비용 포함) 및 미국내 R&D 금액 전액 비용 처리 이자비용 공제 과세대상 소득 기준 변경(현 EBIT의 30%→EBTIDA의 30%) 적격 사업(파트너십, S법인,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 공제를 상향(현 20%→23%) 및 영구화 외국 정부(ex. EU, 호주, 캐나다,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의 역외/차별적 '불공정 세금' (최저한세, 디지털서비스세, 우회이익세 등)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국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를 4년간 5%씩 최대 20%까지 인상 ⇨ 외국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발효일 연기, 재무부에 불공정 세금 리스트 확정 재량권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 세제혜택 확대(529 플랜 비과세 인출 항목 추가) 메디케이드 삭감('합법적 미국 체류 외국인' 또는 '소득신고 완료된 이민자' 세금공제 불허 / 현 연간 가구소득 하위 150% 이하 저소득층 개인에 특별가입기간 지속 제공→특별가입기간 건강보험 가입자 메디케이드 세금공제 종료 / 월 최소 80시간 근무 요구) SNAP(푸드 스탬프) 대상자 근무요건 확대(부양가족이 없는 18~54세 인구에 월 80시간 근무 요구, 55~64세 노인 및 7세 미만 자녀 부양 가족도 근무요건 확대 적용) IRA 관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종료(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종료, 대체연료 차량 주유자산 세액공제 종료,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세액공제 종료,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 제한 및 단계적 폐지 등) 법적 부채한도 \$4조 증액

자료: 미 연방 하원,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외신 종합

□ [영향 및 전망] 패키지 법안은 시행 초기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나 FY34년 재정적자를 \$2.9조~ \$3.3조까지 증가시켜 구축효과 확대 및 금리 상승으로 장기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

- **연방정부의 재정 현황:** 금년 미국의 재정상황은 이미 불안정하며 재무부가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법안 개정에 따른 추가 악화 소지가 상당
 - (현황) FY24년 미 연방 정부부채는 GDP 대비 98%(FY19 79%), 재정적자 6.4%(4.6%)에 육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출 증대, 일시적 감세 조치가 본원재정수지 악화를 견인했으며, 의무 지출 및 이자비용 증가로 부채가 급증
 - (재정정책 우려) 미 재무부는 재정보고서(1.16일)에서 본원재정수지 적자 증가로 향후 부채 비율 급증(24년 GDP 대비 123%→99년 535%)을 전망하고 현 재정정책이 지속불가능함을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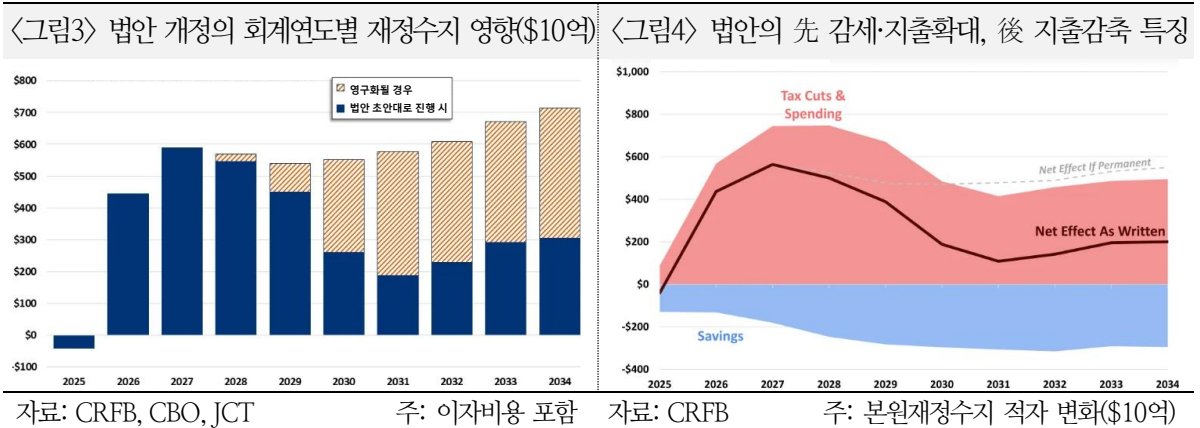
자료: CBO, BofA

자료: 재무부

○ **재정수지 악화 전망:** 법안은 시행 초반인 단기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고 FY34년 재정 적자를 \$2.9조~\$3.3조로 증가시켜 과거에 비해 높은 적자 수준을 초래할 전망

- (법안 도입 초기 영향) 법안의 감세, 지출 확대가 10년 시계 중 초반에 집중되어 시행 초반인 FY26년~FY27년 적자 \$6천억(GDP의 1.8%) 확대 등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 이후 감세조치 만료 시기, 재정지출 삭감 규모에 따라 완화 소지<그림3>

• 관세 세입 증가는 재정적자를 일부 완화할 소지. 국가별 관세율 및 수입가격 탄력성을 고려한 유효관세율이 점차 10%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서 GDP의 약 1% 단기 세입 발생이 예상(BofA)



- (장기 영향) 10년 후인 FY34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6.9%~7.8%(\$2.9조~\$3.3조), 부채비율 125%~129%(+\$3.3조~\$5.2조), 이자비용 4.2%~4.4%(\$1.8조~\$1.9조)로 확대 전망<표2>

• 예산소위원회 중 재정, 군사, 사법, 국토안보 위원회의 신규차입 규모가 확대(-\$4.1조)되고 이자비용이 증가(-\$0.6조)하는 반면, 금융, 천연자원, 교통·인프라, 감독·정부개혁, 농업, 교육·인력, 에너지·상무 위원회의 지출 감축(+\$1.5조)으로 \$3.3조의 재정적자 예상

- (추가 연장 가능성) 연장된 TCJA, 신규 감세 조치, 지출 확대는 중도 일몰되도록 설계되어 선행적으로 발생되나 지출 감축은 '29년 이후에나 후행적으로 발생. 일각에서는 신규 감세 조치 연장 시 10년간 비용 증대(\$2.7조~\$4.5조) 가능성, 법안 순효과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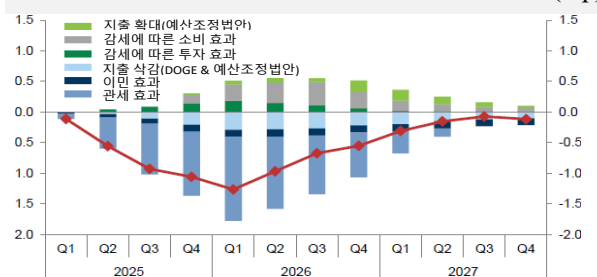
<표2> 하원 예산조정법안의 재정수지 영향 추정(FY2025-FY2034)

구분	FY24년 현행 (GDP 대비 %)	법안 개정 시 (GDP 대비 %)	법안 개정 시 규모 (\$조)
재정적자	6.4%	6.9% (영구화 시 7.8%)	\$2.9 (\$3.3)
연방 정부부채	98%	125% (영구화 시 129%)	+\$3.3 (\$5.2)
이자비용	3.1%	4.2% (영구화 시 4.4%)	\$1.8 (\$1.9)

자료: CRFB, CBO, JCT, House Committees

- **실물경제 영향:** 법안 시행 초기에는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 다만, 관세 영향이 잠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유발, 구축효과 확대로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단기 경기부양 효과) 감세 및 지출 확대로 '26~'27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관세부과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이 재정 효과를 소폭 상쇄할 소지<그림 5>
 - 법안은 '29년까지 개인 소득세 감면 및 투자 인센티브로 현행법 대비 기업 투자와 중산층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26~'27년 성장에 긍정적 영향 예상(Tax Foundation, Guardian, Goldman Sachs)
 - 상원의 법안 개정으로 SALT 공제 한도가 추가 상향되어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소비자들의 '25년 세금감면액을 환급 또는 소급적용하도록 요청할 경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커질 소지(Goldman Sachs)
 - 다만, 관세부과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은 2분기 이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영향을 고려한 경기부양 효과는 재정적자가 증가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잠재
 -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 추가적인 단기 차입 증가 및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의무 지출 및 단기 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CRFB)
 - (차입금리 상승) 재정적자가 커지면 장기 차입비용이 상승압력을 받아 실제로 GDP 대비 부채가 1%p 증가 시 10년물 금리가 2~5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비선형적으로 금리인상 폭이 커질 가능성(BofA)
 - (구축효과 확대) 합동조세분석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는 법안 개정으로 세입 영구적 감소를 전망했으며, 구축효과 확대로 유효 노동 공급을 제외한 총 자본 스톡, 장기적인 연간 실질 GDP 증가율에 당초보다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표3>
 - 패키지 법안은 영구적인 세입 감소를 초래해 GDP 대비 부채를 예산 범위 이상으로 증가시킬 소지. 정부의 부채 상환 규모가 늘면 정부가 자금유치를 위해 점차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 다만, 정부부채 증가로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궁극적인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 통화정책 대응, 정부부채 증가에 대비한 가계의 저축 행태에 따라 완화될 소지

<그림5> 재정정책 변화의 연간 GDP 증가율 영향(%)



자료: Goldman Sachs

<표3> 패키지 법안의 현행법 대비 경제 산출물 변화율

	FY2025-29	FY2030-34	FY2025-34
생산	0.4%	0.2%	0.4%
자본	0.1%	-0.4%	-0.1%
노동	0.6%	0.7%	0.6%
소비	0.7%	0.8%	0.8%

자료: JCT

- **금융시장 영향:** 미국 부채비율이 이미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미 국채의 글로벌 수요 약화로 시장 불안이 지속될 우려
 - 패키지 법안의 제안은 관세로 인한 ‘증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전형적인 ‘적자 재정 감세’[※]로 차입을 늘리게 되나 최근 채권시장 불안으로 투매 위험이 증대(BofA)
 - ※ 적자재정 감세(deficit-financed tax cut): 정부가 감세를 시행할 때 정부지출 삭감 또는 증세보다 지출이 많아 더 큰 예산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를 초래하여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늘려야하는 상황
 - 최근 국채시장의 약화된 수요 하에서 정부의 차입 확대와 부채비율 지속 상승은 시장의 미국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차입금리 급등, 달러화주가 하락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압도하고 장기적인 성장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Moody’s는 법안이 의무 지출과 재정적자를 감축하지 못해 지속적인 재정적자 증가로 부채, 이자부담을 증대시킬 소지를 우려했으며, 경제 회복력 약화,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이탈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적
 - **최종 입법 전망:** 다수 기관은 법안의 최종 통과 시점을 7월말~8월초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며, 상원에서 법안이 개정될 소지도 상당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JPMorgan, BofA, Goldman Sachs 등)
 - 공화당 지도부는 7.4일 법안 최종 통과를 강조했지만, 다수 IB들은 의회 장기 휴회(8.2일~) 및 부채한도 고갈 시점(X-date: 8월말) 등을 고려해 7월말~8월초로 전망
 - 한편,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상원의 일부 재정 강경파, 온건파, 특정 주의 의원들이 재정지출, SALT 공제 한도, 감세 기한 등과 관련하여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 통과에 난항이 예상
 - 일부 공화당 강경파(fiscal hawks) 상원 의원들은 하원이 가결한 법안의 적자 규모에 불만을 표하며 재정지출 삭감 기한 확대 등 더 큰 지출 삭감을 요구
 - 반면, 일부 공화당 온건파 상원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등 지출 삭감 규모 축소, 감세 조치 영구화, 방위비·이민 지출 증대 등을 요구할 소지도 상당
 - 특히 SALT 공제액 한도와 관련하여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세율이 높은 주의 의원들이 공제 한도 추가 상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 난항 및 수정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감세 기조 유지와 재정적자 확대가 전망되어,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국채금리 불안 등이 이어지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